



## 대통령 후보께 보내는 편지

<편집자 주 >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각 후보들은 각종 현안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의 이슈에 묻혀 로스쿨제도 개선에 관한 대안마련은 뒷전으로 밀린 감이 없지 않다. 로스쿨제도 자체의 장점은 인정하지만, 그 부작용이 깊어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예비시험 내지 사법시험의 존치등을 통한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호선 교수님, 성민섭 교수님, 장용근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 대통령 후보께 보내는 편지(1)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변호사 이 호 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분 대통령 후보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 중인 이호선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세 분 중의 한 분은 다음 달 19일이면 향후 우리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갈 최고 책임자로 선출되어 그 다음 날엔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신분으로 새 날을 맞이하시겠지요. 어느 분이 되시건 선거기간 중에 보여주신 후보들의 나름대로의 국민에 대한 애정과 정의관, 국정철학의 비전을 잘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깊이 보고 넓게 보는 선의의 정책경쟁을 잘해 주셔서 선거가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귀한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을 지내셨던 어떤 분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하루만 기뻐고, 그 다음날부터 무거운 짐들의 연속이었다.”고 말입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정책을 가다듬는 과정에 산적한 국가적 난제들을 들여다 보실 수 있는 후보들께서는 이 말씀을 절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정운영의 틀은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겠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국가운영은 크게 보아 정의와 효용성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지면을 빌어 누구든 대통령이 되신 후 정의와 효용성의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문제를 말씀 드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법시험 존치의 당위성에 관하여는 이미 절대적 정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사법시험의 대체수단인 로스쿨과의 비교적 정의의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었고, 세 후보들 중 한 분은 바로 사법시험 출신이시고, 다른 후보들도 주변 참모 중에서 율사들이 많아 그에 관한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새삼스레 사법시험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유리문이라면, 로스쿨은 이 사회의 유리천정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유리천정을 공고히 하면서 기회균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이며, 심리적 균등이 확보되지 않은, 이른바 꿈의 격차가 있는 상태에서의 사회적 역동성을 기대하는 것이 무망한 일임도 새삼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면의 제약 상 이 편지에서는 오로지 공동체 효용의 차원에서, 그리고 조만간 대통령이 되실 세 분 중의 한 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통한 법조인력 배출 통로의 이원화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로스쿨에 계신 분으로부터 로스쿨들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입학정원 100명이 넘는 로스쿨인데도 자체 운영이 버겁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입학정원 100명이면 총 재학생은 300명이고, 등록금을 연간 2,000만원으로 잡으면 60억원입니다. 그런데 로스쿨 인가기준 하한선인 의무적 장학금 비율 20퍼센트를 고려하면 실제 등록금 수입은 48억원 남짓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로스쿨의 경우 전임 교원만 최

소한 40명인데 연봉을 1억으로 잡으면 등록금 수입으로 겨우 전임 교원 인건비를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세 분 후보님들 나름대로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시니 알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정 적자는 볼 보듯 뻔하겠지요.

그나마 제가 전해 들었던 학교의 경우 제법 규모가 있는 터라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고, 그 미만의 입학 정원을 가진 로스쿨들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에 입학 정원이 100명이 안 되는 학교가 15개이고, 40명을 정원으로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들이 매년 감당해야 할 적자가 얼마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미 로스쿨로 인해 한정된 학교 예산이 부당하게 편중되어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같은 학교의 다른 학부들이나 기관들로부터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어 로스쿨 보직 교수들이 공식석상에서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로스쿨도 아닌 학부 대학의 교수가 주재념게도 웬 남의 로스쿨 재정 문제를 걱정하느냐고 핀잔하실지 모르겠으나 로스쿨의 재정난 해결의 해법으로 쉽게 예상되는 입학정원의 증원, 등록금의 인상은 로스쿨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총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불관언할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세 분 중의 한 분이 임기 중에 조만간 골치 아픈 숙제로 떠안아야 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주요한 선거공약 중의 하나인 반값 등록금을 시행한다고 하면 몇몇 로스쿨들은 바로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할 것입니다. 대학등록금 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판에 종전처럼 로스쿨의 적자를 기꺼이 메워줄 능력과 학내 구성원의 합의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에 대한 자원의 과잉배분과 다른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과소배분의 비정상성이 언제까지 용인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은 바로 정부로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선택하실 수 있는 카드가 몇 개나 될까요? 문을 닫건, 등록금을 몇 배로 올려서 해결하건 법학교육 공급자인 학교와 소비자인 지원자들 사이에 알아서 하면 된다고 정부는 팔짱을 끼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세 분 중의 한 분은 솔루션을 제공해야만 하겠지요. 지금도 로스쿨 측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입학정원의 대폭 확대나 아예 입학정원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당초 로스쿨 도입 당시 대법원에서 적정 인원으로 내세웠던 숫자는 1,500명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00명으로 결정되었고, 이 인원내 대해 법조 기득권 세력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난이 많았지만, 금년 제1회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난 뒤 새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취업은커녕 실무수습 자리조차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을 생각하면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밥그릇이 그리 많지 않다는 현실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들을 더 많이 뽑아서 6급 공무원도, 7급 공무원도 변호사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정말 세 분 후보들께서는 이 나라의 실무 공무원이 되는 것조차도 학부 4년을 졸업하고, 1억원이 넘는 돈을 써 가며 3년을 더 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해서 자격을 갖춰야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로스쿨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해법으로 삼는다면 최소한 지금 입학정원에 상응하는 2천명 정도를 증원해야할 것입니다. 증원된 인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로스쿨 추가 선정 요구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도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 같은 이해 단체, 기관들 사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물론 단호한 정치적 결단을 통해 밀어 부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만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접근인지 의문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차라리 5년제 학부 로스쿨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건축학과와 같은 일부 이공계 학부에서는 5년제 학부를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학정원을 건드리지 않고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런 명분도 없고, 국가 재정상 그럴 수도 없음은 누구보다 후보 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로스쿨 설치를 조건으로 폐지한 학부의 신설 아이디

어도 있겠습니까만, 이는 당초 로스쿨 설립의 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 옥상옥의 교육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학부로스쿨"이 근본처방일 수 있으나 성급한 로스쿨 도입처럼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도입은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나갈 길은 로스쿨들 간의 자발적 구조조정 밖에 없습니다. 자립 운영이 가능한 정원 200명 규모의 로스쿨 5-6개 정도만 남도록 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때 로스쿨 시장에서 후퇴하는 학교들을 위한 통로를 마련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예비시험을 둘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추가적인 사회적 논쟁의 여지가 최소화되는 방안입니다.

500명 정도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사법시험이 있다면 과소인원배정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는 로스쿨들의 경우 학부로 돌아와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 인력을 배출하는 방안을 매우 현실적인 매력적 대안으로 여길 것입니다. 일본처럼 법학 기수자에 대한 로스쿨에서의 수업연한 단축을 추가하면 학부 전환의 유인동기는 그만큼 더 커질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께서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13년 예비시험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로 당론을 결정하셨던 사정을 기억하실 겁니다. 굳이 내년이 아닌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수는 없는지요.

얼마 전 문재인 후보께서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로스쿨이 도입되었으니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사법시험폐지와 로스쿨을 도입한 참여정부의 핵심으로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존치된 사법시험으로 인하여 거기에 우수한 지원자들이 몰리고, 로스쿨의 흥행이 실패하여 몇몇 학교가 또 문을 닫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시장에서 국민의 선택이므로 존중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

라 상호 보완적일 뿐 아니라, 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통로임을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도 본인이 구상하는 국정의 틀에서 법조인력 양성이 갖는 의미와 기능,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포함된 구체적 방안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더라도 로스쿨들의 통폐합을 거치지 않고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건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를 통한 법조인력 양성제도 이원화만이 해법입니다.

이것은 세 분 중 한 분이 언젠가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여 정치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쓸 수 있는 유효한 카드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글을 맺겠습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세 분 모두 건승하시고 금번 대통령 선거를 정의와 감동이 있는 국민들의 축제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